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 김국신 · 배정호 · 최춘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 여인곤 · 김국신 · 배정호 · 최춘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인 쇄 2007년 12월

발 행 2007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도서출판 늘품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
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7-05)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14-6 93340 :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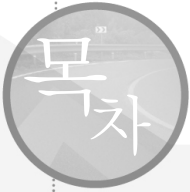
349.11-KDC4
327.519-DDC21

CIP2007003789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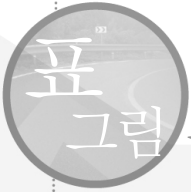
통일연구원



I. 서론	1
II. 주변국의 동북아 및 대북정책 목표	5
1. 미국	6
2. 중국	10
3. 일본	14
4. 러시아	18
III. ‘2·13 합의’ 이후 주변국의 분야별 대북정책	23
1. 핵문제	24
2. 정치 분야	43
3. 안보·군사 분야	56
4. 경제 분야	61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IV. 주변국의 대북정책 전망	69
1. 핵폐기 협상의 장기화	70
2.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72
3. ‘4자 한반도 포럼’의 평화체제 논의	73
4. 중·러의 대북 경제관계 증진	76
V. 정책적 고려사항	79
참고문헌	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87



목차

<표 Ⅲ-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2·13 합의) 내용	26
<표 Ⅲ-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합의문 요지	42
<표 Ⅲ-3> 제1차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의 양측 기본입장	49



서론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는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과 함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국제테러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새롭게 가용해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고, 미국은 이를 통해 세계질서를 계속 주도하려 하고 있다. 군사변환의 주요 내용은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화시대 군사력을 정보화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고,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력 위주로 전환하며, 동맹국관계와 해외주둔 정책을 이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¹ 세계 경제력 2위 국가인 일본은 이에 편승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중·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테러·마약·자연재앙 등 초국가적 안보 위협 요인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하고 있으나,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단극의 국제질서에 반대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극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중·러는 1996년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견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질서는 ‘미·일 대 중·러’의 느슨한 대립구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야기되어 동북아 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6개국이 ‘핵 포기 대 보상’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9·19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약 3년 만에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듯하였

¹-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에 대해서는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Transformation: A Strategic Approach* (Fall 2003); 이상현,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기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13권 3호 (2007), pp. 28~54.

다. 그러나 북·미 양국은 합의문 해석에 차이를 보였고,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 문제, 소위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면서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더구나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 및 이에 대한 10월 14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채택 등으로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2·13 합의’를 통해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련의 양자 및 다자 간 협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2000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 남북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1차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평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 결과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 화해·통일이라는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협의한 결과 8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핵 문제의 협상과정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북한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I
II
III
IV
V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2007년 ‘2·13 북핵 합의’ 이후부터 남북 정상회담까지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이 동북아정책이라는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먼저 주변 4국의 동북아 및 대북정책 목표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은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핵문제, 정치 분야, 안보·군사 분야, 경제 분야로 고찰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주변 4국의 대북정책을 분야별로 전망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은 최근 주변 4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변국의 동북아 및 대북정책 목표

1. 미국

2001년 1월 집권한 부시(George W. Bush) 제43대 미국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확대, 국제테러 제거, 대량살상무기 방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²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동북아 역내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 일본이 양국의 공동 이익, 공동 가치, 긴밀한 국방과 외교 협력을 기초로 동북아 역내와 국제적 사안들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계속 모색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는 북한에 대한 경제태세를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동맹관계가 장기간 동안 지역의 더 많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³ 반면 부시 행정부는 대내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구시대의 패턴이 부활되지 않을까하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관계는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 및 번영을 증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미국은 강력하고 평화로우며 번영된 중국의 등장을 환영하고 중국의 민주적 발전이 그러한 미래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국가의 성격에 관해 근본적인 선택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첨단군사력 증강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의 위대성을 추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한반도 안

²-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p. 1~2 및 (March 2006), p. 1.

³-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 26 및 (March 2006), p. 40.

정 증진,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건 및 환경 문제 등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당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개인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양국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나, 양국 간에는 대만과 인권 문제 등 아직 심각한 불일치의 분야가 있다.⁴

미국은 러시아와 이미 21세기 현실에 기초된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이해가 많은 분야에서 중복되고 있어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이미 광범한 협력을 하고 있다. 양자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항구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데에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엘리트들의 미국 정책들에 대한 불신이 양국 관계개선을 지연시키고 있고,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라는 기본가치에 대한 러시아의 비일관된 언약과 대량살상무기 방지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큰 우려사항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러한 취약점들이 미·러 협력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

한편 2007년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은 ‘악의 축’(Axis of evil)⁶이기 때문에 2002년 10월 제2차

4-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p. 27~28 및 (March 2006), pp. 41~42 .

5-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p. 26~27 및 (March 2006), p. 39.

6-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연설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을 가리키며 사용한 용어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언급했다.



북핵위기 이후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등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양자 협상이나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와 이란 등 중동문제 해결의 불투명,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과 11월 중간선거 패배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할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인접국 및 관련국들이 단합해 북한에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⁷ 이러한 배경에서 부시 행정부는 2007년 1월 16~18일 베를린에서 북·미 양자협상을 하는 등 대북정책을 신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및 대북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미 국무부는 『2008년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북핵 폐기의 시한을 2008년 상반기라고 문서에 명시하였다.⁸

둘째,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완전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시작할 의지가 있으나 북한 핵무기와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관계정상화 및 더욱 긴밀한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되는 경우, 미국은 정상적인 정치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미국은 평양이 경제를 개혁하고 개발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가 수 세대에 걸쳐 쌓여온 고립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학술적, 문화적, 과학적 교류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⁹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

7- “백악관 ‘부시정부 임기 내 북핵 해결 희망,’ 『연합뉴스』, 2007년 9월 19일 <<http://app.yonhapnews.co.kr>>.

8- 『경향신문』, 2007년 3월 23일.

9-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북한 관계정상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

보도 2007년 9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하루 앞두고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해 “북한이 자국 핵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전까지는 큰 진전이 없을 것”¹⁰이라고 밝혔다.

셋째,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부터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왔다. 이는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1년여의 잔여임기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업적을 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워싱턴 포스트』의 글렌 케슬러(Glen Kessler) 기자가 2007년 9월 4일 발간한 『측근(The Confidante): 콘돌리자 라이스와 부시 행정부의 유산 만들기』라는 저서에 의하면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과 보좌진들은 ‘9·19 공동성명’ 이후 몇 달 동안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에 중점을 둔 계획을 입안하였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도 이에 대해 흥미를 가졌고, 라이스 장관도 미 정부내 이견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행정부 내 관리들은 그런 대담한 구상을 작전계획이나 협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2006년 4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 시 “내가 김 위원장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에 대해 후 주석도 부시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 찾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사절단을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실험 준비에 착수하고 7월 4일 중국의

(화해상생마당 강연회 연설, 2007. 7. 11), p. 4. <<http://korean.seoul.usembassy.gov/utills/eprintpage.html>>.

¹⁰ - “미, 현단계 북 테러지원국 해제 의사없다”(종합)-1,” 『연합뉴스』, 2007년 9월 1일 <<http://app.yonhapnews.co.kr>>.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며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하여 때를 놓쳤다.¹¹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4차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11월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¹²고 언급하였다. 미국 정부는 평화체제에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료, 남북한간 정상적인 국제적 국경선 수립,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실행 조치, 군사력 투명성 제고, 국경선 지역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평화체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미·중 간에 상호신뢰와 한국민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 지도력의 발로로 보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협상은 복잡한 임무가 될 것이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나 미국은 2007년 후반기에 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³

2. 중국

2002년 이래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덩샤오핑의 외교전략 지침¹⁴에 입각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국력¹⁵을

¹¹ - “라이스, 9·19 직후 북한과 평화협정 구상 입안,” 『연합뉴스』, 2007년 9월 5일 <<http://app.yonhapnews.co.kr>>.

¹² - “한미정상회담史와 북핵 해법 프로세스,” 『연합뉴스』, 2007년 9월 8일 <<http://app.yonhapnews.co.kr>>.

¹³ -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북한 관계정상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에 대한 전망,” (화해상생마당 강연회 연설, 2007. 7. 11), pp. 4~5 <<http://korean.seoul.usembassy.gov/utills/eprintpage.html>>.

¹⁴ - 1989년 천안문사태 당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덩샤오핑은 “시국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국력을 배양한 후 필요할 경우 행동을 취할 것”(冷靜觀察, 穩住陣脚, 沈着

바탕으로 근대화 이래 가져왔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기까지 중국이 지역 강대국의 모습을 보였다면, 후-원체제 하의 중국은 주변국들과의 선린 우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세계적 차원의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⁶

21세기 중국 국가전략의 핵심 목표는 대내 경제발전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 중국 지도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중국의 국력증강을 통해 중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 국민의 소득수준을 2,000~3,000 달러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내 안정도 중요하지만 평화적인 주변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¹⁷ 중국의 지도자들과 안보문제 전략가들은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질서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데 근본적 장애를 미치지 않는다고 있지만, 불안정 요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⁸ 즉 중국은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

應付，韜光養晦，有所作為)을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지침으로 주문하였다. 鄧小平, “改革開放政策穩定, 中國大有希望,” 『鄧小平文選』, 第3卷(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320~321.

15- 2005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4위 경제국이 되었으며, 일본을 추월하여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6- 배정호 외, 『동북아시아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61.

17- 馮昭奎, “中國與亞洲: 和平崛起與外交新思維,” 『中國外交』, 第5期(2004), pp. 31~32; Evans S. Medeiros and M. Taylor Fravel,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 6 (November/December 2003), pp. 22~35.

18-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4年中國的國防白皮書” <http://www.china-mil.com.cn/site1/misc/2004-12/27/content_97680.htm>; 李景治, “戰略機遇期和我國的國際戰略” 『中國外交』, 第11期(2003), pp. 2~7.

화가 국제질서 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국제테러, 민족·종교 갈등,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국제질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질서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경제발전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방지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지역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며, 지역 다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분쟁 가능성을 예방해 나가려 하고 있다.¹⁹

한편,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정권 안정, 대북 영향력 유지, 비핵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한반도는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와 같은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은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거나 권력투쟁이 일어나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면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 영내로 유입될 수 있다. 적자 상태에 있는 국유기업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면 중국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한의 혼란은 중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일정량의 전략물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은 중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미·일 등 해양세력의 압력을 막아 주는 완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¹⁹- 배정호 외,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p.169.

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미·일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되게 되면, 중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대미, 대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대한민국 관계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일성과 덩샤오핑 등 혁명 1세대 지도부의 사망 이후 양국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의 벼랑 끝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초래하게 될 부작용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포동 2호 등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북한의 위기고조정책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일차적 이유도 무력이나 제재정책을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고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²⁰- 배정호 외,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pp. 179~180.

I
II
III
IV
V

3. 일본

탈냉전 전환기의 일본 정치에서는 신보수 세력이라는 전후세대가 일본정계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보수 세력은 국민들의 기대에 응해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걸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개혁 등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와 같은 21세기를 지향한 일본의 개혁정치는 2001년 4월 선거돌풍을 통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성향 속에서 개혁정치를 기치로 자민당내 파벌 타파 등 전후 일본정치의 주요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국정운영 기반을 강화시켰다.²¹ 전후세대 첫 총리 및 전후 최연소 총리로 2006년 9월 집권했던 아베 신조 총리는 내각의 정치자금 스캔들, 연금기록 분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건강문제 등으로 9월 12일 불명예 퇴진하였다. 같은 달 25일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총리에 당선되었으나, 그는 야당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테러대책특별법 처리, 연금 재원이 될 소비세 인상문제, 지방과 도시의 격차 해소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중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는 유엔중시 전략에 입각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구하고 있고, 환경·제3세계 문제, 인간안보 등 국제사안들에 정부개발 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아·태지역 차원에서 일본은 지역의 국제지도국을 지향하면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의 국제지도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양자간 및 다자간 안

²¹-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3.

보협력, ‘친미입아’(親美入亞) 전략,²² 일본의 독자적 영역 확대 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의 강화라는 목표 아래 양국 안전보장 체제의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 양국의 전략적 상호의존 강화와 파워분담(power sharing), 양국 동맹의 미·영 동맹 수준으로의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²³ 그러나 경제분야에서 일본은 21세기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건설 및 동북아경제권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²⁴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이 북방정책을 전향적으로 수행하여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영향으로 일본도 역시 전후처리를 위한 외교차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대북정책 목표는 납치문제 해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방지, 관계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1970~1980년대에 많은 일본인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행방불명되었다. 일본 당국의 수사와 망명 북한 공작원의 증언에 따라, 이들 사건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납치 의혹이 짙다는 것이 밝혀졌다.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 측은 계속 완강히 부인해왔다. 2002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납치피해자에 관하여 ‘5명 생존,

²² - 寺島實郎, 『國家の論理と企業の論理』(中公新書, 1998).

²³ -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pp. 63~71.

²⁴ - 일본 게이단련(經團連)은 2007년 10월 11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아세안+6) 6개국을 경제통합 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정식 발표하였다.



8명 사망, 2명은 입경(入境)하지 않음' 이라고 일본 측에 전달했으며, 10월에는 생존이 확인된 5명의 납치피해자를 귀국시켰다. 그러나 2004년 11월에 북한이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라며 제출한 뼈에서 본인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

같은 해 5월 평양에서 다시 열린 제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2002년 귀국한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의 귀국과 더불어 생사불명자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 재개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5명을 제외한 납치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아직도 북한 당국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는 16명이다. 일본 정부는 생사불명인 납치피해자들이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 아래 북한 측에 대해 피해자의 즉시 귀국, 진상규명 및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 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대응이 없는 경우에는 엄중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왔다.²⁵

둘째,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일본 안보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 사안으로 간주하고 명백히 반대하면서 북핵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을 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은 일본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큰 우려 사안이다. 이번의 발사는 일본의 안보에 직접 관련되고 또한

²⁵-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 Awaiting the Day When We Will Be Reunited* - (April 2006), p. 2; Headquarter for the Abduction Issue Government of Japan, *The Issue of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For the Return of All of the Abductees* (Tokyo: March 2007), p. 2.

‘북·일 평양선언’의 위반이다”²⁶라고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10월 9일 핵실험을 한 이후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핵 실험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일본의 공동이해 및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일본의 공동목표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에 대한 강한 지지를 강조한다. …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촉구한다”²⁷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셋째, 일본은 북한과의 납치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이 해결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은 2002년 10월 29~30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북·일 관계정상화 회담 직전에 발표된 외무성 문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이는 ① 납치문제의 해결, ② 간첩선,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사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일 안보협의회’ 창설, ③ 2002년 9월 17일 서명된 ‘북·일 평양선언’의 원칙과 정신을 기초로 하는 관계정상화 협상, ④ 일본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정상화 실현 및 한·미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관계정상화 협상 진행 등이다.²⁸

²⁶-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Japan Protests against Launch of Missiles by North Korea,” July 5, 2006 <<http://www.mofa.go.jp>>.

²⁷-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Statement on DPRK’s Nuclear Testing,” November 19, 2006 <<http://www.mofa.go.jp>>.

²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Basic Policy On Japa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Normalization Talks,” October, 2002 <<http://www.mofa.go.jp>>.

4. 러시아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창하여 2000년 3월 대통령에 공식 선출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 2004년 3월 재선되었다. 그는 5월 7일 집권 2기이며 제4대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 때 향후 4년간 국정목표를 축적된 잠재력을 새로운 발전 에너지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실질적이고 확실한 복지 향상을 이루는데 두었다. 그리고 그는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및 강하면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를 강조하였다.²⁹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친여당 의석이 약 72%에 달하는 여대야소의 연방하원(국가두마)과 러시아 수출품의 약 64%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높은 국제가격은 러시아 정치안정과 신속한 경제회복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04년 7.1%, 2005년 6.4%, 2006년 6.7%(추정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³⁰

최근의 국제정세와 관련, 러시아는 긍정적 변화들과 함께 부정적인 추세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 변화로는 세계화로 인한 국제관계의 다극화 추세, 세계정치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한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강화, 이에 따라서 냉전종식으로 상실되었던 균형과 경쟁 환경의 점진적 복구 등이다. 부정적인 추세들은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분쟁지역의 증가와 구소련공화국으로의 확산, 군비경쟁, 핵무기의 우주 배치, 소용량 핵물질의 제조와 확산, 국제적 논의사안(agenda)들에서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의 소멸, 미국의 단

²⁹-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marks b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t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The Kremlin, Moscow,” May 7, 2004 <<http://www.In.mid.ru>>, p. 2.

³⁰- 외교통상부, “러시아 경제동향(2006년),” 2007년 2월 21일 <<http://www.mofat.go.kr>>.

극체제 구축과 타국에 대한 미국식 정치제도와 발전 모델 강요 등이다. 상기와 같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현재 푸틴 대통령은 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 우위라는 세 가지의 대외정책 원칙을 가지고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³¹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안보를 확보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역내국가들과 심도있고 잘 균형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중대한 공동이해와 심각한 차이의 혼합으로 모호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는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초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는 일본과 양국의 이해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초로 포괄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희망하고 있고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 정치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³²

한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북정책 목표는 전통적 선린관계 유지, 대량살상무기 개발 방지, 교역 확대와 다자간 경협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시까지는 남북한이 대화의 증진을 통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이나 북한에서 돌발사태의 발생은

³¹- “President of Russia: Annu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May 10, 2006 <<http://www.president.kremlin.ru>>, pp. 7~8, 10~11; “A Survey of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May 10, 2007 <<http://www.In.mid.ru>>, p. 2.

³²-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IN ASIA IN 2004: SOME RESULTS,” January 13, 2005 <<http://www.In.mid.ru>>; “A Survey of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May 10, 2007 <<http://www.In.mid.ru>>, pp. 35~39.

동북아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이는 러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³³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한국과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는 전통적 선린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6월 28일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³⁴에 의하면 러시아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21세기 세계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대북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은 러시아의 큰 우려를 야기하였고, 러시아는 특히 북핵문제의 미해결을 아·태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³⁵

셋째,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교역 확대와 다자간 경험 등 경제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2006년 2억1,010만 달러인 양국 교역액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이 러시아의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은 1억9,000만 달러이고, 수입은 2,010만 달러이다.³⁶ 또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경제권 편입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원유·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 국경무역,

33- 여인근 외,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외교환경 조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44~145.

34-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mid.ru/mid/eng/econcept.htm>>, pp. 3~4.

35- “A Survey of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May 10, 2007 <<http://www.In.mid.ru>>, p. 39.

36-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www.gks.ru>>.

수산물 가공 및 어업, 남북 도로연결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중·일·몽골
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다.³⁷

I

II

III

IV

V

³⁷-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동방특급열차: 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
(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pp. 81~8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 합의’ 이후 주변국의 분야별 대북정책

1. 핵문제

가. '2·13 합의'와 주변국 반응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부터 북·미 양국은 합의문 해석에 차이를 보였다.³⁸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2006년 10월 9일 단행한 직후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10월 14일 채택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부시 미행정부는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이후 대북정책을 신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및 북·미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12월 18~22일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 등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러시아 정부는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를 대폭 탕감해주는 대신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 1월 16~18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베를린에서 전격 회동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결과 2월 8~13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³⁹에 관한 합의문(2·13 합의)이 서명되었다.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여 핵폐기 과정이 개시된다는 의미이다. 우선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30일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5개 실무그룹은 한반도

³⁸-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이행,' 미국 등 5개국은 '선 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이행, 후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³⁹- 외교통상부,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국문)," 2007년 5월 22일 <<http://www.mofat.go.kr>>.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이다.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일 관계정상화 양자의 실무그룹은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경제·에너지 협력은 한국,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러시아가 의장국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2·13합의’ 직후 30일 이내에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2·13 합의’는 60일 이내 북한내 영변 원자력발전소 및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과 봉인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이 핵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북한·IAEA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대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60일 이내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양자회담 및 북·일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의 과정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계획을 완전히 신고하고 핵시설들에 대한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취할 경우, 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 받기로 하였다. 지원부담은 한·미·중·러 간 균등·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은 자국의 우려사항이 해결되는 대로 동일한 원칙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 완료 이후, 6자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도식화하면 <표 III-1>과 같다.

I
II
III
IV
V

<표 III-1>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합의) 내용

		북측 조치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조치
초기 단계	30일 이내	<5개 실무그룹(W/G) 가동 개시> - 한반도 비핵화 - 북·미 관계정상화 - 북·일 관계정상화 - 경제·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IAEA 사찰관 복귀> -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함. - IAEA의 감시 및 검증활동 수행 <핵포기 대상의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대북 긴급 에너지 지원> - 증유 5만 톤 상당 지원 <북·미 양자회담 및 북·일 양자회담 개시> -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진전 - 북·일간 과거의 미결 관심사안 해결
다음 단계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 사용 후 연료봉 추출 플루토늄 포함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 흑연 감속로 및 재처리시설 포함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증유 95만 톤 상당 지원 * 한국·미국·중국·러시아 4개국은 '평등과 형평' 원칙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
		<6개국 장관급회담 개최> - 초기단계 조치 이행 확인 - 동북아안보협력 방안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 남북한, 미국, 중국의 적절한 '별도 포럼'	

'2·13 합의'는 북한 핵실험 이후 고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적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과정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해 구체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향해 발전되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핵폐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미 제조된 핵무기와 플루토늄 제거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2·13 합의’와 관련, 주변 4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리스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 달성된 6자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더욱 안정되고 안전한 동북아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초기조치이다. 이러한 돌파구 조치는 인내 있고, 창조적이며 강한 외교의 결과이었다. … 모든 6개국 이 합의의 보장자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⁴⁰ 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2월 15일 6자회담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실무그룹과 관련하여 중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지원일정 및 내용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혔다.⁴¹ 중국의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반드시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데에 있다.

일본은 제5차 3단계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북핵보다 납치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아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다소 진

⁴⁰- Secretary Condoleezza Rice, “Briefing on the Agreement Reached at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February 13, 2007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7/feb/80496.htm>>.

⁴¹-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2007年 2月 15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98043.htm>>;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2007年 3月 13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03292.htm>>.

전이 있다하더라도 납치문제에 진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북 식량 및 에너지 지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⁴² 따라서 6자회담이 개막된 2월 8일 아베 총리는 북핵 6자회담에서 설치가 검토되는 북·일 실무그룹회의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에너지 지원 등의 전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은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을 통해서도 표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자국의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주력하였다. 일본은 6자회담과 ‘2·13 합의’의 의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대북 에너지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일본은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① 당분간 북한의 에너지 현황 조사 등 간접 협력을 하고, ② 증유 제공 등 자금 부담은 핵이나 납치문제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면서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⁴³

러시아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관련국들은 북한에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해결안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2·13 합의’가 채택되자 러시아 정부는 이를 환영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로 종료되었다”⁴⁴는 반응을 보였다.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통신사의 정치평론가 코지레프(Dmitry Kosyrev)는 5개 실무그룹 구성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동아시아 판에 해당하고 OSCE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핵 위기 해결에 대한 6년간의 지속적인 기여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당시 상실되었던 러

⁴²- 『共同通信』, 2007年 2月 3日.

⁴³- “[북핵타결] 일, 합의 일단 평가…납치문제 해결 주력,” 『연합뉴스』, 2007년 2월 13일 <<http://app.yonhapnews.co.kr>>.

⁴⁴- “Russia hails result of North Korea talks - chief delegate,” February 13, 2007 <<http://en.rian.ru>>.

시아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⁵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유연성을 갖고 타협하려는 노력 덕분에 ‘2·13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러시아가 ‘2·13 합의’에 따라 대북 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지원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⁴⁶

나. ‘2·13 합의’ 이후 주변국의 정책

‘2·13 합의’ 직후에는 6개국 간의 합의대로 5개 실무그룹회의들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3월 5~6일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7~8일 하노이에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15일 베이징에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 16일 베이징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 17~18일 베이징에서 비핵화 실무그룹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양측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핵화에 대하여 실무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에서 한국 측은 초기단계의 중유 5만 톤 지원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신속한 합의 이행을 촉진하였다.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측은 IAEA 사무총장의 3월 13~14일 방북 결과를 설명하였다. 의장국 중국은 본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좋은 출발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논의 결과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⁴⁷ 또한 중국 외교부는 6자회담 관련국의

45- “The nightmare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over,” February 14, 2007 <<http://en.rian.ru>>.

46- “러 외무 ‘북에 6자회담 합의 외에 추가지원 가능,’” 『연합뉴스』, 2007년 3월 6일 <<http://app.yonhapnews.co.kr>>.

47-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劉建超舉行例行記者會, 2007年 3月 20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04972.htm>>.

합의하에 IAEA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BDA 동결 북한자금 문제는 상기와 같은 6자 회담 진전의 장애물로 등장하였다. 3월 19일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BDA 자금이 전면 해제되면 영변 핵활동을 중단할 것이고, 핵시설 폐쇄조치를 취한 뒤 IAEA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후 회의에는 불참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⁸ 3월 22일 수석대표회의는 휴회를 결정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기회에 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북한은 BDA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2·13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0일 이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마카오 당국의 모든 북한 관련 동결구좌의 해제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4월 10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동결된 2,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계좌이체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향후 정상적인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도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BDA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중개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러시아 정부는 북핵 실험 이후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5월 30일 발효시킴으로써 국제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다. 또한 BDA 동결 북한자금은 미국의 요청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⁴⁸-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劉建超舉行例行記者會,” 2007年 3月 20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04972.htm>>.

의 중개를 통하여 러시아 「중앙은행」에 이체되고, 다시 러시아 「달콤뱅크」(극동상업은행)내 「조선무역은행」 계좌에 6월 19일 입금되었다. 2005년 9월 미 재무부의 BDA 조치 이후 21개월 만에 북한자금 문제가 완전 종결될 수 있었다. BDA문제가 6월 15일 기본적으로 해결되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⁴⁹ 러시아는 BDA에 동결되었던 북한 자금이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주선함으로써 경색국면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북 영향력과 신뢰도를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 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월 3일 미국 메인주 케네벡크포트의 별장에서 가진 회견에서 러시아가 BDA 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BDA문제가 해결되자,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2·13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BDA 문제가 해결된 직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초청으로 6월 21~22일 방북하여 박의춘 외상,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초기조치 이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James Kelly)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 고위 당국자의 방북이었는데, 양국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국 측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힐 차관보는 방북 이후 6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원자로를 즉각 폐쇄할 용의가 있으며, ‘2·13 합의’에 따라 불능화 등 2단계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08년

⁴⁹-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秦剛就匯業銀行涉及朝鮮資金問題取得積極進展答記者問,” 2007年 6月 15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30346.htm>>.

I
II
III
IV
V

에는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연료와 핵무기 및 폭발장치를 포기하고 이어 북·미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⁵⁰

힐 차관보의 방북에 이어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IAEA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IAEA 실무대표단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6월 26~30일 방북하여 ‘2·13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 핵시설 폐쇄·검증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IAEA 대표단은 영변 핵시설을 방문,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을 직접 보고 복측과 ‘2·13 합의’ 초기조치의 핵심 사항인 핵시설 폐쇄·봉인의 검증·감시방식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① 영변 5MW 원자로, ② 건설 중단된 영변 50MW 원자로, ③ 태천 200MW 원자로, ④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⑤ 핵연료 제조시설 등 5개 시설을 폐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⁵¹

한편, 7월 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 부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주요 면담 내용은 ① 북한의 조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 촉구, ② 북·중 협력증대, ③ 6자회담 관련 북·중 협의 증진 등이었다. 특히 양제츠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중국측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양제츠 부장에게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징후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2·13’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다.⁵²

⁵⁰- U.S. Department of State, “Briefing on His Recent Travel to the Region and the Six-Party Talks,” June 25, 2007 <<http://www.state.gov/p/eap/rls/rm/2007/87332.htm>>.

⁵¹- “IAEA방북 성과와 향후 북핵 일정·전망,” 『연합뉴스』, 2007년 6월 30일 <<http://app.yonhapnews.co.kr>>.

IAEA는 7월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북한 핵시설 감시·검증단 파견’을 의결하고, 10명의 검증단을 7월 14일 북한에 파견하였다. 또한 같은 날 한국 측이 제공하는 중유 5만 톤 가운데 1차분인 6,200톤을 실은 배가 북한에 도착하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IAEA 사찰단은 영변 5개 핵시설을 봉인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2명은 북한에 상주하며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IAEA 대표단의 활동은 사찰이 아니라 검증·감시에 국한됨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주변국들은 이를 매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2·13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⁵³

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주변국의 정책

북한은 7월 15일 영변원자로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핵 불능화의 전제조건으로 북·미 양자대화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BDA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판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기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다짐한 ‘2·13 합의’의 다음단계 이행을 신속히 수행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앞두고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 간에 북·미 양자회담이 7월 17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와 북한 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2·13’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응하는 적당한 대가를 제공하면 핵폐기 결단을 내릴 수 있

⁵² - “김정일 ‘한반도정세 완화조짐…2·13조치 이행해야,’” 『연합뉴스』, 2007년 7월 4일 <<http://app.yonhapnews.co.kr>>.

⁵³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劉建超就朝鮮關閉寧邊核設施答記者問,” 2007年 7月 17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41382.htm>>.

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단계 조치의 목표와 6자회담 당사자들의 의무, 일련의 행동 등에 대한 정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국은 북한에게 ‘2·13 합의’의 다음단계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는 수준에 따라 테러지원국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을 적절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⁵⁴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앞두고 6개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라크와 이란 등 중동문제, 국제적 핵확산 방지, 2008년 대선 등을 고려하여 2·13 합의의 조기이행을 통한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7년 내 북핵 불능화와 모든 프로그램 신고 종료, 2008년 내 비핵화의 나머지 과정 수행에 목표를 두고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벽한 신고와 농축우라늄 문제를 중시하였다. 북한은 핵 불능화 이행과 핵프로그램 신고를 수용함으로써 경제난을 타개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변화된 모습을 과시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상응조치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 및 다음 단계 이행문제를 내세우며 회담의 모멘텀 지속을 중시하였다. 수석대표회담 직전 북·미 양자협의를 주선하고 참가국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조기 핵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북한 설득을 위해 지속적 원조를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양보도 설득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다음단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참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국내정치를 고려하여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대화

⁵⁴ - “[6자회담] 北 연내 불능화 시사… 美서 언질받았나,” 『연합뉴스』, 2007년 7월 19일 <<http://app.yonhapnews.co.kr>>.

와 압박을 통한 핵포기'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에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미간 의견차를 조정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⁵⁵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BDA 북한자금 동결해제 문제로 3월 22일 휴회한 후 4개월 만에 베이징에서 비공식회담인 수석대표회의가 7월 18~20일 개최되었다.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다음단계 조치의 이행문제, 6자 외교장관 회의 및 5개 실무그룹 회의 개최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북한의 다음단계 조치 신속 이행문제와 5개국의 상응조치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되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2·13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⁵⁶ 아베 총리가 제6차 6자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6자회담에서의 납치문제 제기'를 강조한 바 있었다. 따라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일본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7월 18일, 영변 핵시설 폐쇄 다음단계의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납치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대북 온건정책을 경계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초기단계 이후조치인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첫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2007년 내 신고와 불능화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 바, 이는 심각한 경제난과 에너지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상응조치에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핵무

55- "[6자회담] 드러난 6개국 입장," 『연합뉴스』, 2007년 7월 18일 <<http://app.yonhapnews.co.kr>>.

56- 외교통상부, "[브리핑] 6자회담-천영우 본부장 현지브리핑(7.18)," 2007년 7월 19일 <<http://sub.mofat.go.kr>>.

I
II
III
IV
V

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를 시사하였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지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 특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과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힐 차관보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원한다”⁵⁷고 말했다. 이는 ‘2·13 합의’에 명시된 중유 100만 톤 이외의 추가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었다.

대북 중유제공 문제와 관련, 북한은 불능화 및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받게 될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을 받는 방식을 처음으로 밝혔다. 중유의 경우 북한이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가치의 다른 품목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북한은 중유뿐만 아니라, 발전소 개보수를 위한 지원도 바란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한·미·중·러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른바 ‘중유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중유 바우처’는 불능화 및 신고 조치를 세부 이행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단계에 따라 책정된 지원 품목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문서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취한 행동만큼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북한은 저장시설의 한계를 감안해 중유 95만 톤을 매달 5만 톤씩 받기를 희망했으나, 자신들의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수석대표들은 북핵 신고와 불능화,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제공 등에 관한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해 집중 조율하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다.⁵⁸ 이외에 테러지원국 지정

57- “힐, ‘미,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희망’-1,” 『연합뉴스』, 2007년 7월 19일 <<http://app.yonhapnews.co.kr>>.

58- U.S. Department of Stat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nd Head of the U.S. Delegation to the Six-Party

해제·HEU 프로그램·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사흘간 진행된 6자 수석대표회담을 결산하는 언론발표문을 7월 20일 발표하였다. 당초 의장성명 도출을 시도했으나 비공식 회담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언론발표문을 내게 되었다. ① 8월 중 5개 실무그룹회의를 모두 개최하기로 하고 불능화 및 신고 단계의 이행 로드맵을 집중 협의하며, ② 9월 초 제6차 6자회담 2단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북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단계의 이행 시간표를 도출하며, ③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⁵⁹

상기의 수석대표회담은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및 상응 조치에 대한 시간표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되어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였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회담장 주변에는 전망을 어느 정도 낙관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⁶⁰고 보도하였다. 이 회담을 통해 중요한 기초적 논의가 이루어져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차기 6자회담에서 시간표에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격심한 의견차의 상존을 우려하였다. 일본측 6자회담 대표단과 밀접한 소식통에 의하면, 시한문제 이외에도 회담 참여국들 간에 의견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첫 핵실험 때 사용한 플루토늄의 생산

Talks Christopher R. Hill On Six-Party Talks Held in Beijing,” July 23, 2007 <<http://www.state.gov/r/pa/prs/ps/2007/88897.htm>>; “6자 수석대표 회담 폐막…‘불능화 시한’ 설정 미룰 듯,” 『연합뉴스』, 2007년 7월 20일 <<http://app.yonhapnews.co.kr>>.

⁵⁹- 외교통상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2007년 7월 20일 <<http://sub.mofat.go.kr>>.

⁶⁰- 『조선신보』, 2007년 7월 19일.

I
II
III
IV
V

지일 가능성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방법을 놓고 의견차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⁶¹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합의에 따라서 8월 7~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2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 16~17일 중국 선양에서 제2차 비핵화 실무그룹회의, 20~21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 9월 1~2일 제네바에서 제2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5~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2차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제2차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6개국은 핵시설 불능화의 시한 설정과 기술적 방법, 북핵 프로그램 목록, 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 문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2·13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불능화 이행단계에서 경수로 제공 논의,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희망하였다.⁶² 북·미 간 입장차이로 최종합의는 6자회담 2단계 본회의로 미루어졌다.

라.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와 주변국의 정책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자, 부시 대통령은 8월 31일 아태지역 언론인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힐 차관보는 9월 1~2일 제네바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 직후, 북한이 2007년

⁶¹ - “美 ‘北核불능화 시한 미합의불구 외교노력 지속,’” 『연합뉴스』, 2007년 7월 20일 <<http://app.yonhapnews.co.kr>>.

⁶² - “비핵화회의 개막…북핵 불능화 협의 착수,” 『연합뉴스』, 2007년 8월 16일 <<http://app.yonhapnews.co.kr>>.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9월 4일 김계관 부상이 북경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진행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⁶³ 또한 김계관 부상은 핵 불능화 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중국 측에 알려주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다음 6자회담에서는 더욱 구체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미·중·러 핵전문가 9명이 9월 11~15일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기술적 문제 처리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북·시리아간 핵기술 협력 의혹이 야기되었다. 핵 장비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이 9월 3일 시리아에 입항한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 북부 우라눔 추출시설로 의심되는 농업연구소를 공습하였다. 시멘트 포장으로 위장했지만 핵 장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존 볼턴(John R. Bolton)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나 미국내 정가소식지인 「넬슨리포트」(Nelson Report)는 의혹 대상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시리아 외무장관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러한 미국의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⁴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는 북한 핵 문제의 모든 측면이 해당되며, 북한 내 활동뿐만 아니라, 핵물질과 기술, 노하우의 확산관련 행동도 포함된다”⁶⁵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9월

⁶³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2007년 9월 6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59430.htm>>.

⁶⁴ - “美전문가들 ‘北-시리아 커백선 대상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 『연합뉴스』, 2007년 9월 21일 <<http://app.yonhapnews.co.kr>>; 『조선중앙통신』, 2007년 9월 18일.

⁶⁵ - “미 ‘6자회담서 확산문제 제기할 것,’” 『연합뉴스』, 2007년 9월 19일 <<http://app.yonhapnews.co.kr>>.



27일 “우리도 관련 보도와 각국의 입장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면서 “핵 확산을 막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⁶⁶고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벨로루시,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아만정권’(Brutal Regime)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와 인권의 확산을 위해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는 다음 날 이란과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⁶⁷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바로 앞둔 상황이었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 대해 주변국들은 2007년 내 불능화 및 신고 이행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북핵 시설은 다시 복구해 운영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불능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 정부는 북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과 연대해 대응하는 한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거듭 촉구키로 하였다.⁶⁸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9월 27~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6개국은 개막식 이전에 남북, 한·미, 중·러, 중·일 간 양자협의를 잇달아 갖고 이번 회담의 목표치를 조율하였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각국은 8~9월에 걸쳐 개최한 5개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각 그룹 의장들로부터 청취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

66- “중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 완료,’” 『연합뉴스』, 2007년 9월 27일 <<http://app.yonhapnews.co.kr>>.

67-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9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에 취해진 제재조치는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26일 관보에 게재된 것일 뿐 27일 열리는 북핵 6자회담과 시기적인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 September 26, 2007.

68- “6자회담 일본정부 입장,” 『연합뉴스』, 2007년 9월 27일 <<http://app.yonhapnews.co.kr>>.



였다. 이후 6개국은 북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북한은 복구에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낮은 단계의 불능화를 선호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가급적 복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높은 단계의 불능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⁹ 협상 결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라는 합의문(10·3 합의)이 10월 3일 발표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 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 3곳의 불능화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이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하며 향후 2주내에 방북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도록 하였다. 북한은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문제와 관련, 북·미 양국은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는 공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조치들에 병렬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북한을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일 양국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신속하게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 이미 전달된 10만 톤을 포함하여

⁶⁹- U.S. Department of State, “On-The-Record Brief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nd Head of the U.S.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Christopher R. Hill,” October 3, 2007 <<http://www.state.gov/p/eap/rls/rm/2007/93234.htm>>; 외교통상부, “[브리핑] 6자회담-천영우 본부장 현지 브리핑(9. 26~30, 10. 3),” 2007년 9월 26일~10월 4일 <<http://sub.mofat.go.kr>>.

I
II
III
IV
V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6차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회담을 개최하되 이전에 회담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III-2> 참조).⁷⁰

<표 III-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합의문 요지

한반도 비핵화	불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내 영변의 3개 핵시설(5MWe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봉제조공장) 불능화 완료 ※ 구체 조치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라 수석대표들이 채택 ○ 미국: 불능화 활동 주도 및 초기 자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내 전문가 그룹 방북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년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비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관계 정상화	미·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공약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을 상기(recalling)
	일·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은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간 집중적 협의를 통한 구체 조치 모색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기제공 10만 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 사항은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 최종 결정
6차 외교장관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시기에 북경 개최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 협의를 위한 6차 수석대표회의 사전 개최

출처: 외교통상부,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조치 합의문 요지,” 2007년 10월 4일 <<http://www.mofat.go.kr>>.

⁷⁰- 외교통상부, 합의문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조치,” 2007년 10월 4일 <<http://sub.mofat.go.kr>>.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하고 ‘2007년 남북정상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정치 분야

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 정책

부시 미행정부는 북한 핵무기와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이후 북·미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나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과 비공식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나 6자회담의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하던 부시 행정부가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 협상 의사를 밝힌 것은 힐 차관보가 김계관 부상과 2007년 1월 16~18일 베를린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북·미 접촉에서였다. 이는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이래 미국 고위관리의 첫 공식발언이었다.⁷¹ 이에 따라서 북·미 양국은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채택한 ‘2·13 합의’를 통해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며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을 설치하였다.⁷²

⁷¹-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7, 2007 <<http://www.washingtonpost.com/>>.

⁷²-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베이징),’ 2007年 2月 13日 참조.

3월 5~6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1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등 현안 전반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김계관 부상은 4월 국무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러지원국 명단⁷³에서 삭제해 줄 것과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제재⁷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⁷⁵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며,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⁷⁶ 제1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북·미가 양자 형식의 회담을 개최하여 수교로 가기 위한 현안들을 논의함으로써 반세기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물꼬를 텃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2차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9월 1일 제네바 미국대표부와 이튿날 북한 대표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하고 미국은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양국은 북한이 가

73- 미국은 1987년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그 후 눈에 띄는 테러지원 행위를 한 적이 없지만 1970년 일본 항공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등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고 있는 점이 부각됐고, 2005년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테러 문제의 하나로 본다는 미국의 입장정리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올라 있다. 미국은 2006년 5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74-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12월부터 적용된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면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고 실제 그 제재 범위도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에 국한돼 효과가 미미하다.

75- “BDA-테러지원국 해제, 북미 관계정상화 분수령,” 『연합뉴스』, 2007년 3월 9일 <<http://app.yonhapnews.co.kr>>.

76- “<힐 2·13 합의> 목표달성 낙관 (종합 2보),” 『연합뉴스』, 2007년 3월 7일 <<http://app.yonhapnews.co.kr>>.



장 관심을 갖고 있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 국무부와 공화당 의원들 간에 이견이 노정되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석방을 연계하는 법안을 준비하였다.⁷⁷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삭제 여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 있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였다.

9월 27~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연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국내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⁷⁸ 따라서 10월 3일 발표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합의문에서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과정 개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을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완수하기로 하는 수준으로 명기되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월 8일 기자들과 만나 “2008년에 비핵화 3단계로 들어설 것이며 그때 가서야 …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도 가능할 것”⁷⁹이라고 말했다.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가 진전됨에 따라서 그동안 거의 동결되었던 북·미간 비공식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는 2007년 2월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

⁷⁷ - “라이스, 북 테러지원국 해제-납치 비연계 시사,” 『연합뉴스』, 2007년 9월 25일 <<http://app.yonhapnews.co.kr>>.

⁷⁸ -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로드맵 이견 집중 조율(종합),” 『연합뉴스』, 2007년 9월 29일 <<http://app.yonhapnews.co.kr>>.

⁷⁹ - 『조선일보』, 2007년 10월 9일.

I
II
III
IV
V

론회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민간연구개발재단」(CRDF)과 함께 워싱턴에서 시라큐스대, 스탠퍼드대, 코넬대, 비정부기구,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미 국무부 관계자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북·미 대학간 과학 협력을 주제로 한 비공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허가 없이 뉴욕 반경 30마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주유엔 북한대표부 외교관들의 외부 나들이를 거의 허용하지 않아왔다. 김명길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포함한 대표부 가족들이 뉴욕에 본부를 둔 「코리아 소사이어티」워싱턴 사무소의 초청 형식으로 9월 8~9일 미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 이례적으로 비공식 워싱턴 나들이를 하였다. 자린 메타(Zarin Mehta) 「뉴욕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10월 초 평양을 방문하여 2008년 2월 경 공연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들은 8월 평양 측의 초청이 있었는데 이에 응하라는 미 국무부와 힐 차관보의 권유에 의해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조선태권도위원회」소속 사범과 선수 등 20여 명의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최초로 미국에 도착하여 ‘2007 굿월투어’ 시범공연을 10월 6~17일 로스엔젤레스 등 5개 지역에서 펼쳤다. 또한 10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권투선수권대회에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선수 3명이 출전하였다. 2001년 시작되었으나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 시라큐스 대학과 북한 김책공대간 정보기술인력 교환 프로그램도 재개되었다.⁸⁰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부시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남북대화가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⁸¹

⁸⁰- 『한겨레』, 2007년 10월 7일; “북·미 비공식 교류 잇따라…‘관계정상화 훈풍’ 솔솔,” 『연합뉴스』, 2007년 9월 10일 <<http://app.yonhapnews.co.kr>>.

나. 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 모색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였던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를 겨우 20분 전에 중국 외교부에 통보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로부터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 대한 보고가 핵실험 직후에 이루어져 중국 측이 몹시 분개하였다.⁸² 이후 북·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서 북한과 과거의 우호협력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샤오밍(劉曉明) 주북한 중국대사는 2월 15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등 11명의 북한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봄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양국이 정치·경제·과학·문화·교육 등 각 방면의 협력을 잘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협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⁸³ 6월 15일 BDA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자, 7월 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식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양자는 “북·중 양국 간 우의는 양국의 공통된 고귀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 영역 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제츠 부장은 북핵문제에 대해 ‘2·13 합의’ 및 ‘9·19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전면적인 결실

⁸¹ - U.S. Department of State, *Daily Press Briefing*, October 4, 2007 <<http://www.state.gov/r/pa/prs/dpb/2007/oct/93248.htm>>.

⁸² - 『朝日新聞』, 2007年 9月 11日.

⁸³ - 中華人民共和國 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大使館, “朝党政軍領導人出席我駐朝使館迎春招待會,” 2007年 2月 15日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09903.htm>>.

을 맺기 바란다고 밝혔다.⁸⁴ 양제츠 부장의 방북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BDA 문제의 해결로 북·미 양국 간의 접촉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다. 둘째,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북한과 북핵 관련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한 것이다.

2차에 걸친 북·미와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자, 중국은 이를 환영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⁸⁵ 또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망하는 기사에서 남북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 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⁸⁶

다. 일본의 ‘대화와 압력’ 정책

2007년 9월 25일 출범한 일본의 후쿠다 신정부는 납치·핵·미사일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북한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하겠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 및 북·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북지위 주도에 따른 일본의 대북 ‘대화과 압박’ 정책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⁸⁴ - 中華人民共和國 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大使館,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會見楊潔篪外長,” 2007年 7月 3日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36597.htm>>.

⁸⁵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劉建超就朝鮮關閉寧邊核設施答記者問,” 2007年 7月 17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41382.htm>>.

⁸⁶ - 『신화통신』, 2007년 9월 29일.

일본의 납치문제 최우선 정책과 ‘2·13 합의’에 대한 에너지 지원 불참 정책 등은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경직되도록 하였다. 하노이에서 3월 7~8일 개최된 제1차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표 III-3>과 같이 납치문제, 과거청산과 보상문제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특히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관계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이미 납치문제는 해결되어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⁸⁷

<표 III-3> 제1차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의 양측 기본입장

의제	일본(하라구치 고이치 대사)	북한(송일호 대사)
납치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관계정상화가 없음을 강조 ○ 생존자의 귀국, 진상 규명, 납치실 행범의 인도, 실종자 조사 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해결된 문제 ○ 재조사는 경제제재의 철회, 과거 청산의 개시과정 등을 보아가며 고려
국교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선언』에서 명기한 것처럼,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경제방식에 의한 일괄적 해결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연행 및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경제협력과 별개임을 강조 ○ 별도의 과거 청산을 요구
차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하지 못함. ○ 베이징 채널을 통해 조정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보였다. 일본 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계관 부상에게 양

⁸⁷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Press Conference, 13 March 2007,” 13 March 2007 <<http://www.mofa.go.jp/announce/press/2007/3/0313.html#2>>; “북한, 일본에는 ‘초강경’…자신감 있다,” 『연합뉴스』, 2007년 3월 7일 <<http://app.yonhapnews.co.kr>>.



자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직전까지 일본을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던 태도와는 달리, 양자협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이튿날인 7월 19일 사사에 국장과 김계관 부상 사이에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양자협의를 내용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납치·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거사 보상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석대표회의의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사사에 대표는 북·일 관계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사사에 대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명 자세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양국간 현안 해결의 진전을 위해 양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과거 식민지시대 보상금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⁸⁸ 이는 일본이 북한의 대일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있지만,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타협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와 그에 따른 북·일관계의 악화 영향으로 조총련은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 최근 일본 재정부 산하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의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와 함께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을 도쿄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북·일관계는 또 다른 갈등을 빚게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는 「조선신보사」와 도쿄도 본부 등에 대한 압류·경매를 통해 약 22억 엔 이상을 환수하였는데,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서도 2005년

⁸⁸- “日, 北 관계개선 상호노력 필요,” 『뉴시스』, 2007년 7월 20일 <<http://www.newsisis.com/newsis/Index>>.

11월 「조은(朝銀) 신용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628억 엔의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조총련측은 대응책으로써 2007년 6월 18일 법원판결 이전에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교육책을 선택하고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조총련측은 5월 31일 오가타 시게타게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인 투자회사 「하베스트사」와 35억 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8일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매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고,⁸⁹ 비난여론이 야기되면서 도쿄 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조총련측의 중앙본부 건물·토지 비밀 매각은 무산되었고, 검찰은 6월 28일 오카타 전 공안청 장관을 체포한 뒤 7월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총련은 위장 매각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카타 전 장관 등의 사기매입 사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발표하였다.⁹⁰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북·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허위등기 혐의를 적용할 경우, 매각을 주도한 조총련측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 북한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¹ 그러나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교육책이 무산되었으므로, 조총련과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특히 7월 19일 북한 외무성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각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이 각서가 납치문

⁸⁹- 『毎日新聞』, 2007년 6월 12일.

⁹⁰- 『서울신문』, 2007년 7월 3일.

⁹¹- “조총련 중앙본부 매각 사기사건 논란,” 『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 <<http://app.yonhapnews.co.kr>>.

I
II
III
IV
V

제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이 납치문제를 포함해 주민들의 생명, 인권, 주권에 관련된 북·일간 우려사안들에 진지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⁹²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에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한 박 의춘 외무상의 수행원 정성일 아시아국 부국장은 7월 30일 ‘조총련의 문제는 제2의 BDA 금융제재’라고까지 비난하였다.⁹³ 조총련의 부실채권 문제와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매각 문제 등은 조총련 내부에도 본국 파와 자립파⁹⁴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7·29 참의원 선거에 ‘일본판 북풍’까지 전략적 활용을 시도하며 유권자의 지지 회복을 추구하였다. 예컨대,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등은 7월 25일 도쿄 시대 가두연설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즐거워하는 것은 김정일뿐”이라며 일본판 북풍의 활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납치문제에 대해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었고,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역사적 대참패로 끝났다.⁹⁵ 참의원 선거의 참패를 계기로 아베 정권의 강력한 정국운영과 경직된 대북 강경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었다.

북·일 양국은 9월 5~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2차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납치 및 과거사 청산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국교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의

⁹²-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North Korea Foreign Ministry’s Memorandum on the Abduction Issue,” July 30, 2007 <<http://www.mofa.go.jp>>.

⁹³- “북한 ‘조총련 문제, 제2 BDA 금융제재’ 비난,” 『뉴시스』, 2007년 7월 30일 <<http://www.news1.com/news1/Index>>.

⁹⁴- 본국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북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그룹이고, 자립파는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총련의 자체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⁹⁵-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 등 북한 측이 중시하는 과거청산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납치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북한 측에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 대표단의 김철호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은 “북·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여서 납치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북·일 관계가 원만해져 신뢰관계가 구축될 경우어나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사청산 문제와 관련, 북한 측은 강제연행과 군대위안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과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반면 일본 측은 식민지 시대의 재산과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일본이 경제협력하는 ‘일괄해결·경제협력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⁹⁶

전후세대 첫 총리 및 전후 최연소 총리로 2006년 9월 26일 집권했던 아베 총리가 내각의 정치자금 스캔들, 연금기록 분실, 참의원 선거 참패, 건강문제 등으로 2007년 9월 12일 불명예 퇴진하였다. 9월 25일 취임한 후쿠다 야스오 신임 총리는 이미 자민당 총재 선거과정에서 “내 손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다”⁹⁷고 발언하는 등 대북 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고무라 마사히코 신임 외상은 9월 26일 핵·미사일·납치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여⁹⁸ 후쿠다 신임 총리의

⁹⁶-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Press Conference b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ACHIMURA Nobutaka,” September 10, 2007 <http://www.mofa.go.jp/announce/fm_press/2007/9/0910.html>; “북·일, ‘국교정상화 위해 노력’ 합의,” 『연합뉴스』, 2007년 9월 6일 <<http://app.yonhapnews.co.kr>>.

⁹⁷- “후쿠다 정권, 한일, 북일, 중일 관계 개선될까(종합),” 『연합뉴스』, 2007년 9월 26일 <<http://app.yonhapnews.co.kr>>.

⁹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Press Conference b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asahiko Koumura,” September 26, 2007 <http://www.mofa.go.jp/announce/fm_press/2007/9/0926.html>.

I
II
III
IV
V

새 정권 들어서도 일본정부의 협상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워싱턴을 방문한 고무라 일본 외상은 9월 27일 일본인 남북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잔류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베이징 6자회담에 참석중인 사사에 국장은 이튿날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과 회담을 갖고 북·일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기초로 양측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합의하였다. 회담중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 반면, 북한은 과거사 보상문제에 중점을 두었다.⁹⁹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8월 9일 아소 외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당시 아소 외상은 “일본은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일본은 북·일 실무그룹회의 내에서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북한에 납치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의 해결을 촉구하도록 희망하였다.¹⁰⁰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쿠다 일본 총리의 전화통화시 후쿠다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하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¹⁰¹ 또한 10월 5일 후쿠다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및 ‘2007 남북정상 공동선언’과 관련, 긴장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안정적인 관계가 정착되면 좋겠다고 평가하였다. 일본은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99- “북-일, 납치문제 등 해결 상호 노력 합의” <사사에>, 『연합뉴스』, 2007년 9월 29일 <<http://app.yonhapnews.co.kr>>.

100-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Teleconference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ugust 10, 2007 <<http://www.mofa.go.jp>>.

101-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대변인 정례 브리핑 - 한·일 정상간 통화, 남북정상회담 관련,” 2007년 9월 28일 <<http://www.president.go.kr>>.



정세 안정에 도움을 주고 결국은 북·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의 범위와 속도의 불확실성, 한국의 대북지원 주도에 따른 일본의 대북 ‘대화와 압력’ 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¹⁰²

라. 러시아의 우호관계 심화 정책

러시아는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나,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채무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회담이 한반도 내 긴장완화와 남북한·러 3각 경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히닌(Valeri Sukhnin) 주북한 러시아 대사¹⁰³는 부임 이전 “우리의 목표는 현 (북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자관계를 발전·심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러·북 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의 협력을 발전시키려면 채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¹⁰⁴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오해와 정보 부족이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3국 장관급위원회들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김정남의 평양 복귀에 관한 보도들과 관련, 8월 28일자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김정남의 평양 복귀가 사실이라면 형제간 권력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러시

¹⁰² - “[10·4 선언] 일정부, 공동선언 평가속 기대·우려 교차,” 『연합뉴스』, 2007년 10월 14일 <<http://app.yonhapnews.co.kr>>.

¹⁰³ - 수히닌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2007년 1월 18일 부임하였다.

¹⁰⁴ - “Russia set to develop ties with North Korea despite nuke problem,” December 29, 2006 <<http://en.rian.ru>>.

I
II
III
IV
V

아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남이 정말 돌아와 노동당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물러난 후 권력은 노동당과 군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¹⁰⁵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외무차관은 “양국 내에서 남북한 교류와 통일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내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후에도 양국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¹⁰⁶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부장관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의 시대를 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¹⁰⁷

3. 안보·군사 분야

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정책

부시 미 행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의 2단계 이행이 끝나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에 서명한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4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시 북한과의

¹⁰⁵- “[러 언론] 북 김정남 북귀 사실이면 권력 암투 생길 수도,” 『연합뉴스』, 2007년 8월 28일 <<http://app.yonhapnews.co.kr>>.

¹⁰⁶- “[러 외무차관] 러, 한반도 통일 두려워 않는다,” 『연합뉴스』, 2007년 9월 24일 <<http://app.yonhapnews.co.kr>>.

¹⁰⁷- “RF hopes Korean peninsula would become peace zone,” October 3, 2007 <<http://www.ruvr.ru>>.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고 11월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포기시 종전선언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북·미 양국은 2007년 3월 5~6일 뉴욕에서 개최된 1차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제15차 시드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부시 대통령은 10월 2~4일 개최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주도록 부탁하였다.¹⁰⁸ 이 결과 남북정상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¹⁰⁹ 합의하였다.

한편 부시 미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의 2단계 이행이 끝나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최종 서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¹¹⁰ 알렉산더 버시

¹⁰⁸ -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 Mee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Roh,” September 7, 2007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7/09/20070907-3.html>>; 청와대브리핑, “[안보실장·대변인] 호주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2007년 9월 7일 <<http://www.president.go.kr>>.

¹⁰⁹ - 청와대, “남북정상,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 선언,” 2007년 10월 4일 <<http://www.president.go.kr>>.

¹¹⁰ - U.S. Department of State, “Briefing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nd Head of the U.S.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Christopher R. Hill on Six-Party Talks Update,” September 14, 2007 <<http://www.state.gov/r/pa/prs/ps/2007/sep/92131.htm>>; “힐, ‘북 확산문제도 6자회담 의제’-2,” 『연합뉴스』, 2007년 9월 15일 <<http://app.yonhapnews.co.kr>>.

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도 10월 8일 기자들과 만나 “중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와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¹¹¹라고 말했다.

나. 중국의 군 인사교류 재개

중국은 2005년과 2006년 전무하였던 북한과의 군 인사교류를 재개하였고, 한반도 중전선언과 관련된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배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총참모장인 양광리에(梁光烈)가 2007년 3월 27일 안영기 북한 인민무력부 외사국장이 이끄는 북한군 대표단과 만났다. 양광리에는 북·중 양국이 수 년간 군사적으로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양국 군대가 발전했다고 평가했으며, 군사 협력은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광리에는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및 군대 건설에 대한 현황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영기 국장은 북·중 양국과 양국 인민은 매우 깊은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다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양국의 우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북·중은 앞으로도 양국 군대가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지역의 발전과 안정에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에 합의하였다.¹¹² 이와 같은 양국 군의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에 대한 견해는 7월 4일에 이루어진 주북한 중국 대사 류샤오밍과 신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김격식 대장과의 만남에서도 재확인되

¹¹¹ 『조선일보』, 2007년 10월 9일.

¹¹² 中華人民共和國 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大使館, “梁光烈會見由安永基率領的朝鮮人民軍代表團,” 2007年 3月 29日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07165.htm>>.

었다.¹¹³ 2005년과 2006년에 전무하였던 양국 간 군인사 교류는 북핵 실험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국이 대북 군사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것과 관련,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07년 10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회담 주체인 3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이며 북한과의 조약 체결국”이라며 “동북아 정세와 평화체제 문제에서 중국은 당연히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¹¹⁴고 말해 중국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다. 일본의 종전선언 추진 용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여 일본이 제외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이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무라 일본 외상은 10월 4일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6자회담 협상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관한 논의가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그러나 6개국은 논의된 사항들을 보고받기로 명확히 되었다. 그래서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¹¹⁵라고 밝혔다.

¹¹³- 中華人民共和國 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大使館, “中國駐朝鮮大使劉曉明拜會朝新任總參謀長,” 2007年 7月 4日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36800.htm>>.

¹¹⁴- “중 외교부, 3자 정상회담서 중국 배제 불가,” 『연합뉴스』, 2007년 10월 9일 <<http://app.yonhapnews.co.kr>>.

¹¹⁵-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外務省), “Press Conference by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asahiko Koumura,” October 4, 2007 <<http://www.mofa.go.jp>>, p. 3.

라. 러시아의 평화협정 참여 주장

‘9·19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는 5개국과 함께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할 것이다”(4항)라는 데에 합의하였고, 이는 2007년 ‘2·13 북핵 합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안보상황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고, 이는 국경지대에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이라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에도 상응한다. 셋째, TSR-TKR 연결, 남북한·러 3각 경협 활성화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할 수 있다.

러시아는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활성화에 만족하고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안 준비 및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의 참여 이유는 첫째, 구소련이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소련의 계승국으로서 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둘째,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조약의 내용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의 비무장화, 북한이 주장하는 일본의 보상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⁶

¹¹⁶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러포럼 제8차 회의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 pp. 58~59.

4. 경제 분야

가. 대북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

3월 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대북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6개국은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시한인 4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이에 대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위해 IAEA 요원을 초청하면 다른 참가국들이 북한에 경제·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초기단계의 중유 5만 톤 지원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신속한 합의이행을 촉진하였다. 6개국은 북한이 초기단계를 이행한 뒤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취하는 다음 단계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 병원에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중유 5,000톤 상당의 200만 달러 규모 소형발전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다음 단계에 북한에 제공할 분량을 중유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노후한 발전소 개보수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중유 저장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한 달에 5만 톤씩 나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뿐 중유 이외 지원을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¹¹⁷

제2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는 8월 7~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6개국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참가국들이

¹¹⁷- “각국별 대북지원 품목 윤곽 드러나(종합),” 『연합뉴스』, 2007년 3월 15일 <<http://app.yonhapnews.co.kr>>.



제공해야 하는 에너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초기 단계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만 톤을 제공한 경과를 설명하였다. 북한은 중유·석탄 등 소비형과 에너지 설비나 발전소 개보수 등 투자형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 의사가 있음을 언급했고, 중국은 8월 중순부터 중유 5만 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일 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러시아는 화력발전소 개수 및 천연가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¹¹⁸ 중국이 8월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공급이 지연되자 북한은 9월 19일부터 6자회담을 개최하지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나. 중국의 경제·무역관계 확대 정책

중국은 북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였으나 ‘2·13 합의’ 이후 북한과의 경제·무역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월 27일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중 간 경제·무역 관계는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한다는 입장과 북·중 간의 공동이익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의 두 가지 출발점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이웃나라로서 북한의 경제와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¹¹⁹ 중국 외교부는 3월 27일 미국의 BDA 동결 조치에 대하여 자국은 기술상의 문제에만 관여할 뿐, 이 문제는 북·미 양국이 해결해야 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중국이 BDA문제와 관계

¹¹⁸ - “북핵 에너지회의 첫날 뭘 논의했나(종합),” 『연합뉴스』, 2007년 8월 7일 <<http://app.yonhapnews.co.kr>>.

¹¹⁹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2007年 2月 27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99837.htm>>.

없이 북·중 간 경제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을 밝힌 것이다. 5월 15일 북한의 제10회 ‘평양 봄 국제상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당 전시회에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 및 류샤오밍 주북한 중국대사가 참가하여 세계 14개국의 상품들을 관람하였다.¹²⁰

7월 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조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한 보 더 잠재력을 발굴하고,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인민의 행복을 만든다(進一步挖掘潛力, 加強互利經貿合作, 造福兩國人民)”라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김영일 내각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제츠 부장은 양국이 우호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의견에 동의하여 양국 영수의 공통인식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 결실을 거두자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정부가 인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며, 시장이 운행한다(政府引導, 民間參與, 市場運作)”라는 원칙을 지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일 총리는 북한은 양국의 우의를 중요시하며, 양국 간 전통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평등호혜의 원칙에서 전략적으로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바라보면서 양국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¹²¹

8월에 발생한 북한의 홍수 재해에 대해서 8월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재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북한에 약품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 의한 원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¹²²

¹²⁰ - 中華人民共和國 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大使館, “朝鮮第十屆平壤春季國際商品展覽會開幕,” 2007年 5月 15日 <<http://kp.china-embassy.org/chn/zcgx/jmhzt319652.htm>>.

¹²¹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2007年 7月 3日.

¹²²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劉建超就中國向朝鮮提供救災援助答

9월 6일 류샤오밍 주북한 중국대사는 이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과 김의준 세관부국 부총국장 등 관련분야 인사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열었다. 류대사는 북·중 경제무역관계가 적극적으로 발전한 데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부단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¹²³

중국이 2~3월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까지 대북 원유수출 총량은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총서」통계에 따르면 2007년 1~8월 대북 원유수출 규모는 총 37만161톤으로 2006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¹²⁴ 또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가 2006년 대북제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증가하였다. 2007년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약 8억6,231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22% 증가해 일본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²⁵

다. 러시아의 양자 및 3자 경협 활성화 정책

북한의 대러 채무 문제가 북·러 경제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 및 남북한과 3자 경협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러 양국의 입장차이와 환율문제 등으로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과 김영길 북한 재무성 부

記者問,” 2007年 8月 30日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56940.htm>>.

¹²³ - 中華人民共和國 駐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大使館, “劉大使爲新老經商參贊舉行到離任宴會,” 2007年 9月 6日 <<http://kp.china-embassy.org/chn/zcgx/jmh/z/t359209.htm>>.

¹²⁴ - “중, 대북 원유수출 작년 수준 유지,” 『연합뉴스』, 2007년 9월 27일 <<http://app.yonhapnews.co.kr>>.

¹²⁵ - 『每日新聞』, 2007年 10月 9日.

상은 2006년 12월 17~22일 채무 협상에서 80% 탕감에 대체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채무 대부분의 탕감을 요청하고 있다.¹²⁶ 2007년 3월 23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조·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위원회」에서는 양측이 연말까지 우호적인 조건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북·러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제4차 「조·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는 2000년 10월 평양에서 3차 회의가 열린 뒤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폴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y)¹²⁷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처장과 림경만 무역상이 각각 양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에서 교역증진, 전력, 금속, 농임업, 교통 등 총 13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제5차 위원회를 2008년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상기 위원회 개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문제를 상호 적절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을 강조했다. 둘째, 실질적인 탕감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셋째, 러시아의 잉여 전력을 대북 송전하고 북한 내 전력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북한은 평양 동쪽에 100MW 규모의 두 번째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과 구소련 시절 평양과 북창에 각각 400MW, 1,600MW 규모로 세워진 발전소 보수작업에 러시아 기업들의 참가를 희망하였다. 넷째, TKR-TSR 연결을 위한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¹²⁸

¹²⁶ - “북한의 채무 80억 달러 중 러시아, 80% 탕감키로,” 2007년 1월 8일 <<http://www.unirusia.com>>.

¹²⁷ - 폴리코프스키는 2000년 5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로 임명되어 6년간 근무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2차례(2001년, 2002년) 수행하였다.

¹²⁸ - “러·북 ‘연말까지 채무문제 해결,’” 『연합뉴스』, 2007년 3월 23일 <<http://app.yonhapnews.co.kr>>.

2007년 4월 말 러시아 철도회사와 북한 철도성 대표들은 평양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6년 10월 착공한 러시아의 하산역부터 북한 나진항까지의 약 55km 철도구간 현대화를 위한 합영기업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간 철도가 연결되면 나진항에 위치한 정유공장인 승리화학공장(연간 처리능력 200만 톤)을 개보수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뒤 이 중 일부는 북한이 사용하고, 일부는 러시아로 다시 수입하는 형식의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승리화학공장을 개보수하겠다는 의향을 북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⁹

러시아 산업에너지부는 블라디보스토크-나진-청진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을 연결해 러시아 극동의 잉여 전력을 북한에 수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북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북핵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러시아 산업에너지부는 2006년 12월 20일 한국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¹³⁰

또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경제권 편입을 위해 TSR-TKR 연결, 원유·천연가스 and 전력 공급, 국경무역, 수산물 가공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남북한·러시아간 3각 경협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 간 선린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TSR-TKR 연결 등 남북한·러 3국간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TSR-TKR 연결 시 연간 러시아는

¹²⁹ - “러시아 가즈프롬社 북한 진출,” 2007년 3월 29일 <<http://www.unirusia.com>>; “北-러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러 ‘한국서 비용 분담을,’” 2007년 5월 29일 <<http://www.unirusia.com>>.

¹³⁰ - “북한의 채무 80억 달러 중 러시아, 80% 탕감키로,” 2007년 1월 8일 <<http://www.unirusia.com>>.

5억 달러, 북한은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TKR-TSR의 연계 운영을 포함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3조 루블(약 5,200억 달러)을 투입하는 장기 투자 계획을 2007년 9월 4일 확정하였다.

보리스 포르트노프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러 포럼에서 “대북 전력공급, 철도 연결, 석유 및 가스 공급 등 세 가지는 북한의 경제 정상화라는 한 맥락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지도부가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투자할 여력이 있다”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¹³¹

라. 미·일의 경제제재 지속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견지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인 북한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거래한 북한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이란 기업에 대해 9월 18일부터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KOMID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회사이자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무기 관련 제품 및 장비의 주요 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이미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미국과의 교역이 금지되고 있어 이 제재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³²

¹³¹ - “포르투노프 경제공동위부위원장 ‘북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아야 한다,’” 2007년 5월 29일 <<http://www.unirussia.com>>.

¹³² - “미 정부, 미사일 거래 북 기업 제재조치 발표,” 『연합뉴스』, 2007년 9월 26일 <<http://app.yonhapnews.co.kr>>.

한편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모든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민간인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등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동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07년 4월 북한이 아직 핵 포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데다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에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0월 13일 만료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10월 9일 의결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쿠다 신 정부와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 등에 응할 경우 지난 여름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³

¹³³ 『産經新聞』, 2007年 10月 12日.



주변국의 대북정책 전망

1. 핵폐기 협상의 장기화

2002년 10월 야기된 제2차 북핵 위기는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 네오콘(Neocon)들의 강경정책으로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이란 사태, 2006년 10월 북핵 실험과 11월 중간선거 패배에 직면하여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7년 ‘2·13 합의’는 이러한 미국 대북 정책의 변화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6자회담 관련국들 노력의 산물이다. BDA 북한 불법 자금 문제 등으로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들의 이행이 지연되기는 했으나 다음단계 조치들이 큰 문제없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10·3 합의’는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로 명시함으로써 ‘2·13 합의’의 다음단계를 이행하고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협상의 계속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핵시설 불능화의 대상만을 언급하고 수준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둘러싼 논쟁, 즉 낮은 단계의 불능화와 높은 단계의 불능화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2007년 말까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성실히 신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북한의 조치들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과정의 병렬성이 어느 측의 불만도 없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10·3 합의’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으로 불능화 단계가 완수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핵폐기 과정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그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미국은 ‘핵불능화 → 테러지원국 해제·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 핵폐기·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이행 → 경수로 지원 →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은 '핵불능화 → 테러지원국 해제·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 경수로 지원 →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협정 체결 → 핵폐기'라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한 이후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면 경수로 지원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먼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에 동조하여 '선 핵폐기·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이행, 후 경수로 지원'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중·러 양국은 '선 경수로 지원, 후 핵폐기·NPT 복귀와 IAEA 안전조치 이행'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수로 문제 이외에도 북한이 이미 추출한 것으로 예측되는 약 50kg의 플루토늄과 보유 중인 핵무기의 완전 폐기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목격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체제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체결문제도 북한의 미사일과 인권, 군축과 군비통제,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북·미 양국이 상기와 같은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협상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국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능력의 동결에 두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방지하며 플루토늄 보유량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핵물질과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개연성도 크다.

I
II
III
IV
V

2.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기반조성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10·3 합의’에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 3개 핵시설의 불능화가 완료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 부시 행정부는 미국법 절차에 따라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고,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테러 규범을 수용한다는 약속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남북자 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 미·일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이미 일본은 토머스 쉬퍼(Thomas Schieffer) 주일 미국대사를 통해 그러한 요지의 전보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¹³⁴ 또한 워싱턴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0월 25일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을 만나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미·일 관계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¹³⁵ 그러나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다음 날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¹³⁶고 논평하였다. 이는

¹³⁴ - *The Washington Post*, October 26, 2007.

¹³⁵ - 『한겨레』, 2007년 10월 28일.

¹³⁶ - “미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 지지 오해 말아야,’” 『연합뉴스』, 2007년 10월 26일
<<http://app.yonhapnews.co.kr>>.

부시 행정부가 일본과의 동맹이 다소 손상되더라도 북한이 핵 불능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삭제되면 장기저리 차관을 받을 수 있고 무기수출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대상에서 빠지게 돼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4자 한반도 포럼’의 평화체제 논의

6자회담 관련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뿐만 아니라, 2007년 ‘2·13 합의’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 경우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2006년 4월 미·중 정상회담과 11월 하노이 APEC 정상회의, 2007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남북한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월 초 현재 북핵문제는 동결 단계를 지나 불능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능화 단계가 종료되고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면 남북한·미·중 4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관련국들의 입장과 정책에 적지 않은 차이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은 불능화 직후 북한이 핵폐기 단계로 움직일 때 평화체제 논의에

I
II
III
IV
V

참여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평화협정에 최종 서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회의 개최도 비핵화의 마지막에 4자 또는 6자가 합의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¹³⁷ 이것이 소위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에서 ‘출구론’이다.

반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이 본격적으로 이행단계에 들어설 때,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조·미 두 나라의 종전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입구론’의 입장에 서있다. 그리고 종전선언 참여국 범위와 관련하여 “3자든 4자든 조선과 미국은 종전선언의 주체에 포함된다”¹³⁸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7년 연말까지 불능화의 완료라는 약속의 이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명목으로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불능화 이후 핵폐기 단계에서 북·미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체제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11월 1일 방북한 불능화 이행팀이 북측과 합의한 약 10개 항목의 영변 3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거의 마무리하여 불능화가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진전되면 평화체제 수립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미·중 4국의 외교장관 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 급 등 실무

¹³⁷ - “버시바우 ‘평화협정이 법적·정치적 종전.’ 『연합뉴스』, 2007년 10월 25일 <<http://app.yonhapnews.co.kr>>.

¹³⁸ - 『조선신보』, 2007년 11월 1일.



선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협상을 하다 보면 가파른 단계로 가서 종전선언 등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협상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4자 정상선언’을 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 제1조에 종전선언이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¹³⁹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출구론’과 유사하나 평화협상의 중간단계에 ‘4자 정상선언’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을 배제한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일본은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추진을 용인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일 것이나 협상이 진행되면 이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변 4국과 남북한의 입장과 정책들을 고려할 때,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핵의 불능화 수준을 약간 낮추더라도 ‘10·3 합의’의 이행을 조속히 종료하고 남북한과 미·중 ‘4자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평화체제 협상은 4자 종전선언이나 정상선언의 시기,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과 군비통제 등의 문제를 둘러싼 4국간의 논쟁으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¹³⁹ -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브리핑,” 2007년 10월 31일 <<http://sub.mofat.go.kr>>; “평화협상 개시선언은 실무급서…협상 중 정상회담 추진(종합),” 『연합뉴스』, 2007년 10월 29일 <<http://app.yonhapnews.co.kr>>.

I
II
III
IV
V

4. 중·러의 대북 경제관계 증진

핵실험 직후 북한에 가해진 유엔안보리의 1718호 대북 제재가 아직 까지 유효하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2007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연장하였다. 그러나 핵문제 진전과 함께 중·러의 향후 대북 경제관계는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 중국의 2007년 GDP가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과의 경협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인 고유가의 영향으로 급속히 경제회복을 하고 있는 러시아는 대북 경협 확대뿐만 아니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3각 경협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셋째, 중·러 양국은 남북경협 확대 및 북·미 관계 진전에 따른 자국의 대북 영향력 축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리귀(申立國) 헤이룽장성 부성장은 김영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과 9월 19일 하얼빈에서 회동하고 무역,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 제2위의 철강 생산업체인 탕산(唐山) 철강그룹은 10월 20일 허베이(河北)성 탕산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총국 및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김책공업구에 연산 150만 톤 규모의 제철소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합작의 향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 언론은 북·중 양국이 신의주에 이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에 주민생활 및 농업생산과 직결된 의류, 식료품, 식량, 농기구, 비료 등을 주로 거래할 공동 물자교류시장을 건립하기로 정식 합의하였다고 11월 2일 보도하였다.¹⁴⁰

¹⁴⁰ - “北-中 합작제철소 계약성사 ‘막전막후,’” 『연합뉴스』, 2007년 11월 1일 <<http://app.yonhapnews.co.kr>>; “北-中 온성군에 물자교류시장 건설 합의,” 『연합뉴스』, 2007년 11월 2일 <<http://app.yonhapnews.co.kr>>.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 교역 증진, 북한 내 발전소와 전력 시설 및 정유공장 개보수,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블라디보스톡-청진 송전망 연결 및 전력 수출 등에 매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 아무르 지역에는 약 2천명의 북한인들이 러시아 기업 3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지역 목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아무르 지방 당국은 북한과 삼림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시베리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최초의 송유관이 2008년 중 완공되면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에너지 협력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I

II

III

IV

V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정책적 고려사항

상기와 같은 한반도 주변 4국의 동북아 및 대북정책 목표와 ‘2·13 합의’ 이후 주변국의 분야별 대북정책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중동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부시 대통령 임기 내 외교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는 2008년 8월까지 핵폐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불능화 이후 핵폐기 과정의 신속한 진전보다는 경제·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핵불능화 상태에서, 즉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이나 핵물질과 부품의 제3국 유출 등을 방지하는 북핵 관리 수준에서 임기를 만료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에 ‘9·19 공동성명’에 따른 조속한 핵폐기가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임을 6자회담과 남북회담 등에서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폐기 협상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거나 지연전술을 구사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주변 4국과 함께 압박정책을 수행하고 대북 경협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법상 전쟁상태는 보통 ① 평화조약에 의하여 종료된다. 그러나 ② 교전국 쌍방이 사실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전쟁의사를 포기한 경우 및 ③ 일방의 교전국이 타방의 교전국을 정복병합한 경우에도 전쟁은 종료한다. 이 밖에 ④ 전승국에 의한 일방적 전쟁상태 종결선언도 전쟁종료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이 있으나, 정설은 아니다. ①과 ②는 합의에 의한 전쟁종결의 방식인데, 특히 ①은 명시적 방법이고, ②는 묵시적 방법이다. 이에 대해 ③은 일방적 행위에 의한 전쟁종결의 방식이다.¹⁴¹

따라서 한·미 정상이 논의하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국제법상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한·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화협정에 종전선언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9·19 공동성명’이 본격적으로 이행단계에 들어설 때 북·미가 중심이 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일반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평화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4자 정상선언’이 가능함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02년 10월 야기된 제2차 북핵 위기는 약 5년 동안 교착상태에 있었으나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는 냉전종식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향후 핵폐기 및 평화체제 협상에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대북관계는 핵실험 직후 매우 악화되었으나 북핵문제 진전, 고위인사 교류 등으로 과거의 우호 상태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동북진흥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면에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가 각종 대북 외교채널을 통해 개방 확대를 촉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의 후쿠다 정부는 아시아 외교의 적극적 추진 및 대화중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후쿠다 정부와의 전략적

⁴⁴¹- 이한기, 『신고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0), p. 789.



정책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화 중시의 온건 실용주의 후쿠다 정부도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 국교정상화를 향한 대북 접근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보상·배상금 등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납치문제의 해결 등에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문제에 관한 한·일 전략적 정책 대화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한반도 포럼’이 개최되면 이로부터 소외된 러시아는 매우 큰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한반도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화협상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평화협정 체결시 보장국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에너지 자원 확보, TSR-TKR 연결, 남북한·러 3각 경협 등의 문제에서 러시아 정부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5년 11월 19일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채택된 ‘한·러 경제통상협력 행동계획’(Action Plan)의 이행 정도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배정호 외.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_____.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_____. 『7·29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여인곤 외.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외교환경 조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이한기. 『신고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0.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동방특급열차: 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 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러포럼 제8차 회의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

Headquarter for the Abduction Issue Government of Japan. *The Issue of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For the Return of All of the Abductees*. March 2007.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 Awaiting the Day When We Will Be Reunited -*. April 2006.

寺島實郎. 『國家の論理と企業の論理』. 中公新書, 1998.

2. 논문

이상현. “미국의 군사변환 전략: 기원, 성과, 평가.” 『국가전략』. 제13권 3호, 2007.

Medeiros, Evans S. and Fravel, M. Taylor.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 6, November/December 2003.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Transformation: A Strategic Approach*. Fall 2003.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and March 2006.

鄧小平. “改革開放政策穩定,中國大有希望.” 『鄧小平文選』.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李景治. “戰略機遇期和我國的國際戰略.” 『中國外交』. 第11期. 2003.

馮昭奎. “中國與亞洲: 和平崛起與外交新思維.” 『中國外交』. 第5期. 2004.

3. 기타자료

『경향신문』.

『뉴시스』.

『서울신문』.

『신화통신』.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한겨레』.

The Washington Post.

『共同通信』.

『産經新聞』.

『朝日新聞』.

『毎日新聞』.

<<http://en.rian.ru>>.

<<http://korean.seoul.usembassy.gov/utills/eprintpage.html>>.

<<http://kp.china-embassy.org/chn/zcgx/>>.

<<http://sub.mofat.go.kr>>.

<<http://www.chinamil.com.cn/site1/>>.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

<<http://www.gks.ru>>.

<<http://www.In.mid.ru>>.

<<http://www.mid.ru/mid/eng/econcept.htm>>.

<<http://www.mofa.go.jp>>.

<<http://www.president.go.kr>>.

<<http://www.president.kremlin.ru>>.

<<http://www.ruvr.ru>>.

<<http://www.state.gov/>>.

<<http://www.unirusia.com>>.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재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근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흙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근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세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흙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스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에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용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춘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